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문흥호**

- I. 서론
- II.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
- III.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외적 환경
- IV. 양안통일과 대만독립의 이상과 현실
- V. 결론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곧 양안의 통일과 대만의 독립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대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속박을 벗어나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 아닌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과 대만이 염원하는 독립을 각각 의미하지만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중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만 역시 양안관계를 주종관계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중국의 일국양제통일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 실제로 대만은 중국, 중화의 허명을 벗어나리고 대만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만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가? 사실 통일 혹은 독립만이 대만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2005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부단히 변화하며 현재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역시 그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다. 더욱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변화는 중국과 대만의 대내적 상황 뿐만 아니라 대외적 환경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안관계의 생성, 변화과정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은 통일과 독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만이 원하는 독립을 모두 원하지 않는 현상유지 하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대만카드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통일과 대만의 독립 가능성을 각각 전망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만 문제, 양안관계, 중국 통일, 대만 독립

I. 서론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 특히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인가 아니면 사실상의 독립 국가인가는 대만문제의 본질이며 이는 결국 양안의 통일과 독립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 2758호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만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인 자체가 대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더욱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주권적 지위를 번갈아 가며 인정, 부정했고 그 결과 일방에 대한 유일 합법적 지위의 부여가 기존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다른 일방의 자연스러운 승복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일방의 극심한 반발과 유일 합법적 대표권을 새롭게 획득한 다른 일방이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면서 정치·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소위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초하여 ‘하나의 중국’과 ‘두개의 중국’ 사이에서 이중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는 무관한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대만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즉 그들은 중국은 오직 하나라는 공식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이를 부정함으로써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부추겼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실상의 정부 중화민국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하나의 중국에 편입시켜 대만에 대한 통치권을 명실 공히 행사하는 것이며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국제사회가 승인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속박을 벗어나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과 대만이 추구하는 독립을 각각 의미하지만 양자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중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만 역시 양안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만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가? 사실 통일 혹은 독립만이 대만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

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부단히 변화하며 현 단계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역시 그러한 변화의 결과물로 존재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으로 상징되는 통일과 독립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분리 독립 움직임과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라는 상호모순적 관계발전을 중심으로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환경, 특히 대만문제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요인과 함께 최근 점증하고 있는 일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식의 통일과 대만식의 독립이 직면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분석함으로써 양안의 통일과 독립 문제를 의미하는 소위 ‘통독문제’(統獨問題)의 향배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

최근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 변화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은 양안의 정치적 대립 특히 천수이벤(陳水扁) 민진당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만의 정체성 확립과 독립 움직임을 둘러싼 양안의 대립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안의 경제적 상호의존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분리 독립을 지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호모순적인 양안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대내적 환경 변화는 결국 대만문

제와 양안관계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 대만의 정체성 확립과 독립 행보

민진당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법통(法統)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점차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대립으로 변질되어 왔다. 사실 과거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부자의 국민당정부에서는 중국의 의미와 통일 방식, 통일 주체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뿐 하나의 중국,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중국정부는 적어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중국대륙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던 국민당 집권 시기가 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과 양안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대만 공히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에 집착했을 뿐 양안의 통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만 출신을 주축으로 한 민진당이 50여년의 국민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집권한 이후에는 누가 ‘하나의 중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느냐는 공방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만문제, 양안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적 표현(political rhetoric, terminology)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Brown 2004, 1-34).

민진당은 장징궈의 건강 악화로 장씨 일가의 초법적 통치가 막을 내리기 시작할 무렵인 1986년 9월 ‘당외’(黨外) 인사로 지칭되던 대만 출신의 진보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되었다.¹⁾ 이들은 야당

1) 원래 ‘당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대만의 유일한 정당이던 국민당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50년대 후반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국민당체제에

의 설립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근 40년의 계엄령 통치하에서 대만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인사들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시모노세키조약(the treaty of Shimonoseki)에 따라 대만의 일본 할양이 결정된 1985년 4월 17일 이후 일본이 대만의 치안을 장악한 1895년 6월 초의 기간까지 대만에 존재했던 ‘대만공화국’(The Taiwan Republic)의 부활을 염원하고 있다.²⁾ 즉 이들은 무력했던 청조의 희생양으로서 불행한 운명을 겪어온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화민국보다는 대만공화국에서 찾고자 한다.

실제로 대만 내에서는 자신들이 사실상의 독립국이지만 국제정치의 불합리한 원칙과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동시에 대만공화국의 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배와 국민당 독재의 억압을 야기한 중국, 중화의 허명에서 벗어나 대만, 대만인(Taiwanese)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만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는 중국사의 미미한 부분으로 편입된 대만사가 아닌 대만만의 고유한 역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정부는 “그렇다면 중국의 역

심한 불만을 갖고 있던 지방 정치인들과 국민당의 계엄통치에 저항했던 반체제인사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Rigger 2001, 15-20).

- 2) 대만의 일본 할양이 결정되자 당시 대만에서는 청조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대만의 정치적 운명을 대만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소위 ‘삼국간섭’(Triple Intervention)이 일본의 랴오둥(遼東)만도 점령을 저지했듯이 외세를 동원하여 일본의 대만 점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대만의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1985년 5월 25일 대만공화국이 건국되었다. 당시 대만공화국은 공화주의 및 제헌주의에 입각하여 정부, 의회 등을 구성하였으나 결국 조직적 결함과 대만인들의 적극적 지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1895년 5월 29일 1만 5천명의 병력 파견으로 시작된 일본의 대만 점령이 본격화되고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6월 5일 중국대륙으로 도피하면서 초단기간에 붕괴되었다(Morris 2002, 8-18).

사가 대만인들에게는 세계사인가?”라고 비난하는 한편 대만의 역사 재평가 작업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 12월부터 ‘대만문헌사료출판공정’(臺灣文獻史料出版工程)을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十一五計劃)의 ‘국가중점출판계획’에 편입시켰다.³⁾

물론 현실적으로 민진당정부가 주력하는 대만의 정체성 강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대만의 급진적인 독립 주장으로 연계되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을 중국과 대만, 중국인과 대만인의 구도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좌절된 대만공화국 수립 시도와 1947년 국민당정부의 대만 정지 과정에서 빚어진 ‘2. 28 사건’⁴⁾ 등 뼈아픈

3) 중국의 대만역사 관련 국책출판사업은 ‘海峽兩岸出版交流中心’의 주관하에 중국 제 1, 제2 ‘歷史檔案館’과 샤먼(廈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총 550권,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료 출판을 완료한다는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정치,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동시에 대만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사료 발굴과 문헌정리를 통하여 천수이볜 정부의 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다(人民日報 2007 / 1 / 18; 中國時報 2007 / 1 / 18).

4) ‘2.28’ 사건은 대만이 탈식민화 및 대륙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사건으로 그 내면에는 당시 대만이 안고 있던 정치·경제·사회적 계단 문제와 이에 대한 장제스 국민당정부의 무자·무능·무도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국민당정부의 비체계적이고 강압적인 정치·통합정책은 대만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한 일본의 식민통치에 비해 국민당지배가 전혀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부정부패, 비효율, 불안정 등의 측면에서 더 악화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했다. 실제로 당시 대만에서는 식민통치 기간에도 보기 어려웠던 기근자들이 증가하고 몇 십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콜레라 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반감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정부는 대만인들의 불만을 무시한 채 소위 대륙출신인 ‘외성인’(外省人) 위주의 정책을 지속했고 심지어 당시 격화일로에 있던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 대만의 전략적 자원을 대거 동원했다. 국민당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대만인들로 하여금 국민당정부의 통치를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식민지배’로 인식시켰고 결국 저항을 폭발시켰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사실 과거 대만의 국민당정부하에서 ‘2. 28’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어 왔으며 리덩후이(李登輝) 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공식적 진상 규명이 시작했다. 참고로 ‘2. 28’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구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자율권에 대한 대만인들의 요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주목해야 한다. 즉 당시 국민당정부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방주의 혹은 지방분권 옹호자들을 가차 없이 공격한 반면 대만 내에서는 일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결국 하나의 중국, 두개의 중국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중국대륙과 무관하게 살아온 대만의 역사적 실체를 재확인하고 대륙에 대한 피해 의식(contingental complex)을 극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행을 안겨준 중국대륙의 굴레를 벗어나 대만인으로 살아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최근 민진당정부는 주요 국영기업의 명칭에서 중화, 중국을 대만으로 일괄 변경하는 소위 ‘정명운동’(正名運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 역시 대만의 정체성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⁵⁾

대만의 이러한 정체성 강화 움직임은 대만문제를 점차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는 구도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는 중국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중국지도부가 더 이상 대만을 조속한 ‘해방’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대만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대만문제의 해결 노력은 물론 가시적 성과의 창출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천수이볜 총통이 2004년을 전후하여 대만 독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그 일

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에 의해 형성된 효율적 거버넌스(effective governance)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당정부가 이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결국 이 상반된 두 입장이 충돌했다(Phillips 2003, 84-85).

- 5) 실제로 대만은 2007년 2월 12일 천수이볜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中華郵政公司’를 ‘臺灣郵政公司’로 현판을 바꾸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궁극적으로 독립을 겨냥한 ‘去中國化’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시도는 대만의 해당 기업과 대만인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人民日報 2007 / 2 / 14; 中國時報 2007 / 2 / 15).

환으로 2008년을 상정한 신헌법 제정과 공포, 주요 정치·안보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추진하자 중국은 2005년 3월 14일 대만 내 독립·분열 행위시 초헌법적, 무력적 대응조치를 인정하는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을 제정했는데 이는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민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대만의 정체성 강화와 독립 움직임으로 인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공화국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진당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소위 ‘양국론’을 실천하기 위한 대만의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천수이볜 총통은 2006년 신년사에서 대만인은 중국의 노예가 아니며 양안관계는 주권·민주·평화·대등의 4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급기야 같은 해 2월에는 비록 상징적인 의미에서나마 양안의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통일위원회의 기능과 국가통일강령의 적용 ‘종지’(終止)를 전격 선언했다.⁶⁾ 이는 결국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에 있어서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양안의 정치적 갈등이 근본적인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로 상존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6) 2006년 3월 10일 천수이볜의 Washington Post 기자회견에 따르면 천 총통은 원래 ‘廢除’(abolish)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동결(freeze) 혹은 중단(suspend)의 사용을 권유함으로써 결국 국가통일위원회의 기능 종지(cease to function), 통일강령의 적용 종지(cease to appl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을 특사로 파견해 천수이볜 총통을 설득했다(中國時報, 2006 / 3 / 15).

7) 일례로 2007년 6월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이 ‘타이완’ 명목의 유엔가입 신청과 관련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중국정부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즉 천 총통은 미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의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 없는(不能等死) 대만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대만의 국민투표 추진 강행은 양안관계에 대한 도전이자 대만의 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독립주의자들의 이러한 모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人民日報 2007 / 6 / 14).

2. 양안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위한 양안의 정치적 대립이 현 단계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적 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경제교류 역시 양안관계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만약 정치적 대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단히 심화되고 있는 양안의 경제적 상호의존 양상만을 주시한다면 이미 ‘하나의 중국’이 실현된 것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안의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의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으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불과 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⁸⁾

사실 그동안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대립과 간헐적인 군사적 긴장, 직접적인 통항(通航)·통우(通郵)·통상(通商)을 의미하는 ‘삼통’(三通)의 금지 방침을 우회하는 다양한 형식과 경로를 통해 경제적 원-원의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여 왔다.⁹⁾ 특히 양안의 인적

8) 대만의 입장에서 양안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 현황을 살펴 보면 우선 2006년도 양안의 총교역량은 881억 2천만 달러인데 이는 대만 대외교역 총액의 20.7%이며(홍콩과의 교역량을 합칠 경우 27.2%), 이중에서 대 중국 수출이 633억 3천만 달러(대외 수출 총액의 28.3%, 홍콩 수출액을 합산하면 39.8%), 수입이 385억 5천만 달러(대외 수입 총액의 12.2%, 홍콩 수입액을 합산하면 13.2%)에 달한다. 또한 2006년도 대만의 대 중국 투자는 1090건에 76억 4천만 달러이다(대만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1991년~2006년 말까지 대 중국 투자 총액은 3만 5천 542건에 549억 달러로서 총 해외투자의 54.5%). 한편 양안 인적 교류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연인원 408만 4천 800명이며(대만 전체인구의 약 17.1%)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24만 3천 185명에 달한다. <http://www.mac.gov.tw/big5/statistics/ass_em/9512.pdf>(검색일: 2007년 4월 27일).

9) 예를 들어 민진당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만은 전면적인 삼통의 전 단계로서 특정 지역간의 통항을 의미하는 ‘소삼통’(小三通)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기업의 중국 내 투자 규제 완화 및 투자의 상한선 상향 조정, 대만 주식시장에 대한 대륙인들의 투자 허용 등 양안 경제교류의 규제 장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중국의 샤먼(廈門), 마웨이(馬尾)와 대만의 진먼(金門), 마주(馬祖)간의 소삼통은 양안교류를 한 단계 확대시켰으며, 일례로 2006년 1년 동안 샤먼-진먼을 통해 연인원 60만 7천명이 왕래했고, 마웨이-마주를 통해서도 연인원 4만 5천명이 왕래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교류는 단순 왕래 차원을 넘어서 투자, 취업, 결혼 등을 통한 반영구적 정착 단계로 나가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대만의 경제침체와 제한된 경제활동 범위를 벗어나 중국대륙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¹⁰⁾ 이들의 입장에서 양안의 해묵은 이념적 갈등과 통일·독립 공방은 양안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는 거의 무관한 비생산적, 정략적 게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안의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의 확대 심화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대만인들의 기존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과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사회적 경직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더욱이 자신들이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직간접으로 연계되면서 대만 주민들의 소위 ‘대륙관’(大陸觀)이 크게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디트머(Dittmer 2006, 252)는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대륙을 방문한 이후 상하이(上海) 등 중국의 대도시 중산층 생활수준이 대만의 중산층에 뒤떨어지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대만의 많은 능력자(ablest professionals)들이 자발적으로 중국대륙에서 영구적인 생활 근거지를 찾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양안의 인적 교류, 경제교류 확대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대만인들의 대 중국 인식 변화가 곧바로 양안의 통일, 독립문제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즉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工商時報 2007 / 1 / 5; Ma 2003, 45-47).

10) 이러한 추이는 중국내 대만인의 중국내 ‘個體戶’(소매점, 식당, 목욕탕, 사진관, 차량수리, 가전제품 수리 등 소규모 개인 사업) 진출을 허가하면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공상관리국 쑹유펑(鍾攸平) 부국장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홍콩, 마카오 주민들의 대륙 내 개체호 진출을 허용한 결과 2006년 말 현재 2746호가 대륙에 투자 진출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대만 주민들에게도 개체호 설립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工商時報 2007 / 2 / 15).

비정치, 민간차원의 양안교류 확대가 양안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안의 통일, 독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안의 교류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양안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또한 이들의 요구가 중국과 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양안 경제교류의 선봉자로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臺商)들은 이미 천수이볜 민진당정부의 중국관련 정책 및 독립 추진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천수이볜 총통의 비현실적인 독립 추진 움직임 및 이와 연계된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이며 실제로 민진당정부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적인 여론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¹¹⁾

이처럼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한 정경분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양안의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는 양안 주민들의 상호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점차 쌍방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양안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중국의 통일관과 대만의 독립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는 통일, 독립 정책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양안관계에서 경제교류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국,

11) 한편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들은 2007년 4월 1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全國臺灣同胞投資企業聯誼會’ 창립 총회를 개최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천원린(陳雲林)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만 기업인들의 이러한 조직은 향후 양안관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무력적 위협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독립 행보를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中國時報, 2007 / 4 / 16). 실제로 중국 정부가 대만 천수이볜 민진당정부의 독립 움직임을 비난할 때마다 예외 없이 대만 인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는 안정된 양안 관계를 희망하는 대만 경제계의 반발을 예상하는 것이다.

대만 공히 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안의 경제관계가 정치·군사적 대립의 수위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대만의 외교공세에 대한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양안의 경제교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 기업들의 대륙투자는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서 점차 기술·자본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전환되고 투자 지역 역시 광둥(廣東), 푸젠(福建) 지역에서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만정부는 자국의 산업공동화와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에 따른 안보위협을 우려하여 대만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를 자제하고 아세안(ASEAN) 지역으로 투자 대상을 전환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대만기업들이 대륙투자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홍콩기업으로 위장하여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며(Sung 2005, 137-140) 실제로 홍콩의 대륙투자 상당부분이 대만기업의 자본을 위장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양안의 경제교류 확대와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대만 사회 전반에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독립 열망을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묻어두고 ‘불통불독’(不統不獨)의 평화적 현상유지에 충실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간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사실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인과 관리자로서의 정부입장이 동일할 수 없으며 더욱이 대만경제가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통상, 투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양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¹²⁾

결국 양안관계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부조화 속의 조화, 불균형 속의 균형을 이루며 소위 ‘호보호리’(互補互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색해 가고 있다. 사실 100만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둥, 푸젠 등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에 거주하는 대만인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이들의 왕래를 위한 부정기 전세기가 취항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군사적 대립과 통일·독립, 삼통·삼불의 명분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물에 압도되어 단절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우선 정치·비정치, 정부·민간 차원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현 단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적극 모색해가는 중국인들의 실용적인 접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2) 천수이볜 총통은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양안 경제교류에 대한 “積極管理, 有效開放”을 강조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만경제의 대 중국 종속 가능성을 의식해 대륙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선별적 허용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대만 경제계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만기업인 ‘Formosa Plastics’(臺塑集團)의 왕용칭(王永慶) 회장은 그 동안 대 중국투자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2007년 1월 4일에는 천수이볜 총통의 규제 방침을 겨냥하여 민진당정부가 중국과의 전면적인 ‘삼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中國時報, 2007 / 1 / 5).

13)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양이(楊毅)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개발은행을 주축으로 중국내 대만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전세기(包機)의 경우 추석, 설(春節) 등 특정 시기에 국한된 전세기 운항을 주말 정기노선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양안 민간항공사간에 협의를 시작했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人民日報 2007 / 2 / 1).

III.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외적 환경

양안관계가 통일 아닌 통일, 독립 아닌 독립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의 상당부분은 중국과 대만의 대내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 요인 중에서도 대만문제가 지역안보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 당사국들로 하여금 대만문제에 관여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황은 비록 시기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전히 양안관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군사·안보적 현안은 대만해협과 양안관계의 변화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중국, 미국, 일본의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양안관계의 이러한 군사·안보문제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여전히 모호하고 특히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제어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은 지상군의 대대적 감축과 정예화, 핵전력 및 해군·공군력 강화 등의 국방현대화 과정에서 대만 요인을 철저히 고려했으며 특히 대만의 독립 억제, 미국 등 외세의 개입 차단은 안보전략의 핵심 사안이다. 물론 중국이 추구하는 최근의 국가전략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장,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요구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술·자본 및 전략적 자원 확보에 중점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위협론의 확산, 국방비 과다 지출 등의 부정적 측면을 유발하게 될 급속한 군사력 강화는 우선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즉 후진타오체제

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으로 이어진 현대화, 개혁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무실외교, 실용외교, 경제외교의 연장선에서 평화, 발전, 합작을 기치로 한 평화외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대만해협의 전략적 통제를 위한 해군 및 공군력의 대대적 강화, 대만을 직접 겨냥한 700-800기의 미사일 배치 등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램턴(Lampton 2007, 117-119)은 대만문제 장악을 위한 군사적 의지와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확신(reassurance)시키려는 중국의 정책이 실제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그 예로 최근 미국의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1%의 응답자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병력 파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과 평화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중국이 통일을 포기하거나 대만이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군사적 대립은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양안의 군사·안보문제는 중국과 대만이 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14) 즉 제4세대 지도부는 중국이 21세기 국제질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이를 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변의 내실을 다지고 자국의 부상에 대한 외부 세계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팽창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이해와 신뢰, 존중과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소위 책임있는 대국(responsible great power)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해 나가려는 장기적 전략이다(문흥호 2006, 11-12).

15)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역지력,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최근 많은 미국인들이 부시(George W. Bush)정부의 이라크전쟁에 극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무력 분쟁시 미군의 파견에 대한 찬반 여부의 질문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니고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및 역내 안보문제와 상호 연계된 다자적, 복합적 사안이다. 중국과 대만 역시 양안간 군사·안보 현안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쌍방의 기본 입장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중국은 양안의 안보문제를 순수한 내정인 대만문제의 일부분으로 선을 긋고 제3국의 개입 여지를 봉쇄하려는 반면 대만은 양안의 안보문제를 의도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다자안보의 틀 속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정착, 더 나아가 자신들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Shlapak, 2003, 143-153). 결국 중국과 대만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안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대 요인이다.

군사안보부문을 포함한 대만문제의 대외적 환경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대만문제의 생성, 변화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미래가 중국, 대만보다는 미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양안관계의 또 다른 특징이자 대만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대립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갖는 중·미관계에 있어서 대만문제는 향후 양국간 경쟁구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며, 따라서 중국, 미국을 불문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 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용인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는 미국이 대만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만의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대만정책의 핵심이다. 즉 미국은 양안의 통일방식과 대만의 정치적 지

위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대립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식의 통일과 대만식의 독립을 모두 반대하고 양안의 현상유지를 통해 ‘대만 카드’를 최적화함으로써 중·미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래서터(Lasater 2000, 18-19)는 많은 미국인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realpolitik) 중국을 주요 강대국으로 대우하는 동시에 대만을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으로 지지하기를 원하며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dual-track approach)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실용주의(pragmatism), 이상주의(idealism) 가치관이 혼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스칼라피노(Scalapino 2003, 3-9)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대만을 사실상의 독립된 정치실체(a de facto separate political entity)로 인정하고 상호 모순된 두 갈래 길(incongruous paths)을 따라 왔으며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대 중국, 대 대만정책은 ‘세력간 조화’(concert of powers)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정책을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적절히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불확실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민족 차원의 과제이며 정치지도자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신년사, 중요 행사에서의 연설 등에서 예외 없이 대만문제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확고한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당·정·군의 권력을 승계한 후진타오로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가시적 성과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도 신년사에서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기본방침으로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 대만해협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통일대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人民日報, 2007 / 1 / 1). 그러나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미국의 이중정책과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능력이 없다. 즉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안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의지와 실천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는 대만문제의 교착상태를 장기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반복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결국 대만문제가 안고 있는 대외적 요인의 핵심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견제수단으로 대만카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최소화 내지는 무력화하려는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경쟁이다. 또한 미국의 이중전략에 편승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대만,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에 편승하여 ‘보통국가’의 조기 실현을 시도하는 일본 등의 주변 국가와 중국의 점증하는 갈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만문제의 대외적 요인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의 경제적 윈-윈보다는 지역적 패권경쟁을 의식한 정치-안보적 대립의 양상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중국이 군사력 강화,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공세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일본 역시 이미 2004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가상 적’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팽창을 자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모두가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특히 그 성패의 관건적 요인으로서 상대국과의

패권경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吳廣義, 2004, 3-6; Tsukamoto 2006).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전환기에 도달했으며 2006년 이후 중국이 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에 중점을 두는 ‘화자우선’(和字爲先)을 강조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만은 이를 예외적으로 다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07년에 들어서도 중국은 정치,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일본이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취임 이후 ‘방위청’(防衛廳)의 ‘방위성’(防衛省) 승격, ‘국가안보회의’ 신설 초안 발표, 자위대의 해외 임무 수행시 무기 사용 제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아베 수상이 일본 수상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거론하면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¹⁶⁾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정치·안보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점차 대만문제가 향후 양국관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우선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변화가 대 중국 견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결국 대만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

16) 일례로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우화이중(吳懷中)은 ‘人民日報’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을 자국의 최대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서는 정치대국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점차 군사적 역량을 국제적 교섭의 직접적인 수단 내지는 대국화전략의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하며 그중에서도 중국의 견제 즉 ‘제화’(制華)를 불가피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필자만의 특정 의견이라기 보다는 전환기의 중일관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반적인 인식과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吳懷中 2007, 1 / 18).

역시 대만문제가 중·일관계 변화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즉 일본은 대만을 50년간 식민지배한 경험 등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대만문제에 대한 일종의 지분 의식을 갖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대만출신을 지칭하는 ‘본성인’(本省人) 정치지도자 대부분이 일본과의 관계발전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으로 이어지는 소위 독립지향적인 최고 지도자들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다각적 접근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 2006년 3월 9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이 의회 발언에서 대만을 정치·경제·법치의 측면에서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표현의 실수라기보다는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기본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대만문제의 이러한 대외적 요인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외세 개입을 극력 저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 향배의 최대 변수로 잔존할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일국양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만문제의 대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과의 싸움에 더 많은 힘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겨냥하여 동북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미·일 군사동맹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만해협은 한반도와 함께 전략적 변화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의 공식적 지지와 무관하게 절대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식’, ‘비공식’ 입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면서 통일과 독립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할 것이다. 즉 미국은 양안관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목표로 중

국과 대만을 불문하고 양안의 현상 타파를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무력사용 운운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만의 무리한 독립 시도에도 반대하는 이중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물론 최근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하여 중국이 고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를 공약하는 위험한 줄타기정책(tightrope policy)에 안주하기보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충돌(strategic train wreck)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만정책의 재조정(restructuring)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Carpenter 2005, 143-1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만의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발전, 민주화를 촉진하는 방편이자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자국에 유리한 최적의 양안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정책은 미국의 정권변동 등 국내 정치적 변화, 중·미관계 변화, 중국과 대만의 대내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책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으로서도 양안의 통일과 독립,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모두 바라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과 이중정책을 통한 양안관계의 현상유지 이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중국으로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입장과 전략적 운용이 불만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 정치권의 독립 움직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요인 역시 미국이라는 점을 내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IV. 양안통일과 대만독립의 이상과 현실

1. 통일의 이상과 현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의 해결은 어느 국가적 과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적, 이념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즉 통일대업의 실현은 중국이 아무리 양안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고 정책적 탄력성을 유지한다 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이상이다. 이는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자가 하나의 중국을 완결하기 위해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후진타오 역시 예외는 아니며 통일의 이상 실현을 위한 단호한 의지표명은 물론 보다 진전된 성과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어찌면 그에게 가장 벅찬 과업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통일의 이상과 대내외적 현실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더욱이 이상의 실현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면 될수록 이를 제어하려는 반작용 또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후진타오가 최대 역점을 뒀야 할 시급한 과제는 통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즉 비록 통일대업의 신성함을 훼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후진타오 주석이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시장주의의 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내적인 문제의 해결을 좌시하고 통일에 주력한다면 대내적으로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지도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가 있는 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지령성 통제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내적 개혁과 자력갱생보다는 외향형 경제를 지향하는 대외적 개방을 통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실용적, 현실적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대만과의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했고 특히 양안의 경제교류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결국 대만문제와 통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인들이 통일문제에 전혀 무관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많은 중국인들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여 ‘타이완 공화국’으로 독립하려는 시도를 수수방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만에 대한 무력적 통합을 선불리 시도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양안의 평화적 현상유지이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양안의 무리한 통일, 독립 시도다.

이처럼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는 대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후진타오체제하에서도 대만문제에 대한 이성적, 실용적 접근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 사회적 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후진타오의 입장에서 절대 절명의 과제는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시장주의의 생산적 동거를 위해 기존의 이념·원칙을 재해석, 재적용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해가는 것이다(Thornton 2006, 130-140; Shambaugh 2003, 280-282). 이처럼 중국의 정치과정뿐만 아니라 가속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중

국민들의 가치관, 인식 변화가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상징적으로 최고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통일의 이상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국은 양안의 통일과 독립문제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상대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겹다. 미국이 양안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상과 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고 ‘일국양제’를 기꺼이 수용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대만카드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안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힘겹게 상대해야 할 대상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다.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은 적어도 당분간 국가차원의 이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양안의 통일을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힘이 중국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양안의 통일을 최선, 대만의 독립을 최악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최악의 경우를 피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양안관계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일의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양안의 통일보다는 대만의 독립 억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대만문제 해결의 철칙으로 고수하는 동시에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

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유보할 것이다.¹⁷⁾

둘째, 양안관계 발전의 원동력인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교류협력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경제협력은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소위 ‘생존공간’ 확보를 위한 대만의 외교공세를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사회가 점차 중국대륙과 구별되는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국제여론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가장 우려한다(Corcuff 2002, 243-246). 따라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대만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더 나아가 이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2. 독립의 이상과 현실

양안의 통일이 중국의 지상 과제인 것처럼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대만의 포기할 수 없는 숙원이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구성 요건을 갖춘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국제사회의 ‘무적자’(無籍者)로 지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상이 당장 현실화될 수 없는 것처럼 독립

17) 후진타오 주석은 “대만문제와 관련된 긴급사태 발생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무력동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허용한 ‘반국가분열법’의 제정 당시인 2005년 3월 13일 전인대 인민해방군대표 전체회의에서 군이 “居安思危”(편안한 삶 속에서도 만일의 위기에 대비한다) 정신으로 “주권 수호, 영토 보존”에 대한 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人民日報 2005 / 3 / 14).

에 대한 대만의 이상 역시 현실의 장벽을 넘기 어렵다.

우선 대만은 자신들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규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의 높고 두터운 벽을 극복할 논리와 이를 관철할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정교한 논리와 양안관계가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 주장은 중국의 빈틈없는 방어벽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 또한 중국이 강조하는 유사시의 무력 사용 불가 또한 대만의 독립 행보를 가로 막는 중요한 장애물의 하나이다. 즉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실제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기에 앞서 중국지도부가 인식하는 대만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느 누구도 무력 사용 불가를 단언할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최후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은 비록 사용 범위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불가능한 선택만은 아니다. 실제로 대만의 독립 행보가 구체화될 경우 중국의 무력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대만인들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양안의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상호의존 심화 역시 대만의 분리 독립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양안교역과 대 중국투자를 벗어난 대만경제를 상상하기 어렵고 대만 경제계 역시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처럼 독립을 향한 이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대만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즉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는 유엔가입을 위한 시도와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조직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장기

적인 전략이다.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IGO),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대만정부의 노력은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 직면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일부 비정치적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만의 옅서버 자격 부여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이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총회에 대만의 옅서버 자격 부여 문제가 상정되었는데 비록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처음으로 이 안건에 찬성 투표하였다(Li 2006, 599-603). 앞으로도 대만은 ‘Taipei China’ 혹은 ‘Taiwan China’ 등의 명칭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을 적극 시도할 것이다.¹⁸⁾

둘째,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대만의 안보를 미국의 전략적 변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즉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일 군사협력의 확대 조정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대만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 일본의 대 중국전략 변화 조짐을 감지하고 그 틈새를 겨냥한 것으로 대량의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부터 군사정보의 교류, 대만의 방위 공약에 대한 미 정치권의 지지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대만정부는 미국 의회의 친대만 의원들의 모임인 ‘Taiwan Caucus’를 중심으로 미국 정치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나 최근 미 의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기존의 ‘판시’(關係)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⁹⁾ 또한

18) 예를 들어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에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PKM’의 명칭으로 가입했는데 ‘TPKM’은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의 영문표기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사실 대만정부는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만문제의 국제화’에 데 매우 유익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미국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Taiwan Caucus’ 소속 의원들은 실제로 친대만적이지도 않고 반중국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친금전적(pro-money)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White III 2006, 210-211).

셋째, 양안의 인적 교류 및 경제교류의 확대는 대만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민진당, 국민당, 친민당(親民黨)을 불문하고 대만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양안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어떠한 정책도 대만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최근 천수이볜 민진당정부의 정체성 위기와 민심이반 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V. 결론

통일과 독립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크나 큰 격차가 보여 주듯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쌍방의 지도자가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설사 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과연 승인할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또한 중국과 대만을 불문하고 통일, 독립의 이상을 독자적으로 강행,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 외교,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는 결국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과 독립을 도모하는 대만의 입장이 조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안관계가 중국이 원하는 중양-지방관계, 대만이 원하는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19) 대만의 미국 정치권 로비의 어려움은 2007년 4월 15일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로 부임한 전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 우자오시에(吳釗燮)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는 양안의 ‘주전장’(主戰場)인 워싱턴 정가에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대만대표부가 미 의회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今日晚報 2007 / 4 / 16).

가 아닌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유지 상황은 곧 중국과 대만이 나름대로 통일과 독립을 도모하며 기회를 엿보는 기간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양안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은 중국과 대만, 통일과 독립 중에서 누구의 편인가?

우선 양안의 현상유지와 기다림이 결국은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즉 중국정부는 이미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종합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여년의 양안 교류협력 결과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의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수백 기 미사일보다도 대만의 독립 행보를 더 제약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 대부분은 양안의 체제·이념적 차이를 실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안의 경제수준 격차 역시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진당정부가 독립의 이상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여 현실성 없는 독립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결국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의 대만 기업인들은 천수이볜의 무리한 독립 추진 움직임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실제로 이들은 대만 내의 반민진당 여론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양안의 통일과 독립 가능성이 잠재된 상태에서의 현상유지가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양안의 통일이 곧 시간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대만을 불문하

고 현상유지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대전제는 대내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사회적 과도기에 처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면적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 사회적 다원화 등의 요구에 직면하여 대내적 안정 기조를 상실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유리한 국면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중국이 대내적 불안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군사력 동원을 포함한 무리한 통일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과거의 지도자들에 비해 대내외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대내적인 변수와 함께 양안의 통일과 독립의 유불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양안관계의 현상유지 수준을 관리·조절하고자 하며(balancing the status quo) 실제로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대만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양안이 현상유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의한 대만의 통일을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만이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순순히 수용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21세기 자신들의 유일패권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견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만은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카드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안관계는 통일·독립을 향한 치열한 공방과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협력의 공존하는 이중구조 속의 현상유지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통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만과의 대화와 합의 혹은 강제적 수단의 동원중에서 어느 하나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미국의 전방위적 지원이 상존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의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통일과 독립을 불문하고 양안관계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변화와 지속이 공존하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고유한 속성이다.

참고문헌

- 문흥호. 2006. 『중국의 21세기 대외전략과 한반도』. 서울: 울력.
- Dittmer, Lowell. 2006. "Bush, China, Taiwan: A Triangular Analysis," Shiping, Hua(ed), *Replections on the Triangular Relations of Beijing-Taipei-Washington Since1995: Status Quo at the Taiwan Strai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i, Chien-Pin. 2006. "Taiwan'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sian Survey*, Vol. XLVI, No. 4, July / August.
- Ma, Ying-jeou. 2003. "Cross-Strait Relations at a Crossroad: Impasse or Breakthrough," Donard S. Zagoria *Breaking the China-Taiwan Impasse*. Connecticut: Prasers Publishers.
- Brown, Melissa J. 2004. *Is Taiwan Chinese?: The Impact of Culture, Power, and Migration on Changing Ident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penter, Ted Galen. 2005.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orcuff, Stéphane. 2002. "Conclusion: History, the Memories of the Future," Stéphane Corcuff(ed), *Memories of the Future: National Identity Issues and the Search for a New Taiwan*. New

- York: M. E. Sharp, Inc.
- Lampton, David M. 2007.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January / February.
- Lasater, Martin L. 2000. *The Taiwan Conundrum in U.S. China Policy*. Colorado: West view Press.
- Morris, Andrew. 2002. "The Taiwan Republic of 1895 and the Failure of the Qing Modernizing Project," Stéphane Corcuff(ed), *Memories of the Future: National Identity Issues and the Search for a New Taiwan*. New York: M. E. Sharp, Inc.
- Phillips, Steven E. 2003. *Between Assimilation and Independence: The Taiwanese Encounter Nationalist China, 1945-1950*.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gger, Shelley. 2001.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 Scalapino, Robert A. 2003. "Cross-Strait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Donard S. Zagoria, *Breaking the China-Taiwan Impasse*. Connecticut: Prasars Publishers.
- Shambaugh, David. 2003. "Remaining Relevant: The Challenges for the Party in Late-Leninist China," David M. Finkelstein and Maryanne KivChien-Pinlehan, *China's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the Fourth Generation*. New York: M.E Sharpe.
- Shlapak, David A. 2003. "The Cross-Strait Bal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U.S. Policy," Donard S. Zagoria, *Breaking the China-Taiwan Impasse*. Connecticut: Prasars Publishers.
- Sung, Yun-Wing. 2005. *The Emergence of Greater China: The Economic Integration of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hornton, John L. 2006. "China's Leadership Gap," *Foreign Affairs*, Vol. 85, No. 6, November / December
- Tsukamoto, Kazuto. 2006. "One-time friend of Japan turned activist over Yasukuni issue," *IHT·Asahi*, February 22.
- White III, Lynn T. 2006. "PRC, ROC, and U.S. Interest: Can They Be Harmonized?" Shipping Hua(ed), *Reflections on the Triangular*

Relations of Beijing-Taipei-Washington Since 1995. New York: Palgrave Macmillan.

吳廣義. 2004. “信任’何以成爲中日關係的焦點問題,”『亞非縱橫』(第2期).

吳懷中. 2007. “軍事與大國夢,”『人民日報』(1月 18日).

[http: / / www.mac.gov.tw / big5 / statistics / ass_em / 9512.pdf](http://www.mac.gov.tw/big5/statistics/ass_em/9512.pdf)(검색일: 2007. 4. 27).

『人民日報』(2005年 3月 14日; 2007年 1月 1日, 1月 18日, 2月 1日, 2月 14日, 6月 14日).

『中國時報』(2006年 3月 15日; 2007年 1月 5日, 1月 18日, 2月 15日, 4月 16日)

『工商時報』(2007年 1月 15日, 2月 15日)

『今日晚報』(2007年 4月 16日)

ABSTRACT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Taiwan Issue and The Cross-Strait Relations: Change and Continuation

Moon Heungh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e essence of the Taiwan issue is about establishing a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the unification of China versus the independence of Taiwan.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na, settling this issue is exercising its sovereign power over Taiwan. For Taiwan, it is about escaping from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being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The stern reality is that the unification of China is incompatible with the independence of Taiwan. China will not accept the independence of Taiwan and Taiwan doesn't want to accept the Chinese unification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hich degrades it into a provincial government. In fact, Taiwan is trying to break from the vain title of 'China' and 'Sinocentrism' and establish its own identity by having a new understanding of Taiwanese history.

So, is it impossible to solve this problem? If we only define the solution of the Taiwan issue as the unification of China or the independence of Taiwan, there is no possibility of settlement, at least, in the short term. Nevertheless, the surrounding of this issue constantly changes and the present state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is a result of these changes. The Taiwan issue is affected by not only the internal environments of these countries, but also the externa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which has engaged in the process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issue,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of in this conflict. The United States wants neither the unification of China nor the independence of Taiwan and is trying to make the best use of Taiwan to restrain the rapid rise of China.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concrete analysis of the change and continuation of the various environments that affect the Taiwan issue and articulate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the independence of Taiwan.

Key Words: The Taiwan Issue, The Cross-Strait Relations, The Unification of China, The Independence of Taiwan